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친문실세' 거론

이호철 전 정무수석·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이름 나와

곽상도 "3월 중에 한 분 영향력 미쳐"...사실로 드러날 경우 文정부 타격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정권 실세로 여겨지던 인물들의 이름이 속속 거론되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성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이호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시 편드운용사 및 창업투자 자문사 등 금융관련 업체에서 골프채와 항공권, 차량 제공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유 전 부시장 개인 비리의 혐의는 상당히 밝혀진 상황에서, 이목은 '사건 본류'로 여겨지던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의혹에 쏠리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정감사장에 대한 첨보를 입수하고 10월에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이후 금융위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

했다. 그는 금융위를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며 승승장구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호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언급했다. 유 전 부시장이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과 청와대 감찰 무마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고, 이 인물이 이 전 수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 불특채인 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이 사업은 애초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

호 울산시장도 추진했지만, 그쪽은 배제되고 부산시가 유치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3월 중에 한 분이라는 이모씨의 영향력이 더 세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전해철 민주당 의원과 함께 문 대통령의 측근 '3월' 중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전 수석에 이어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의 이름도 나오기 시작했다. 천 선임 행정관이 이인걸 전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천 선임 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 전 부시장이 천 선임 행정관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과 함께 수시로 텔레그램을 주고 받으며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인사에 개입한 내용이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천 선임 행정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 펀드'를 관리하는 펀드운영팀장을 지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비서실을 거쳐 2017년 대선 캠프에서는 문 대통령 후원회 대표로 활동했다. 이후 청와대 내 인사 분야를 담당하면서 인선 등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천 선임 행정관은 전날(11월 30일) 자신의 SNS에 "자고 나니 유명해졌다"는 영국 시인 바이런의 말을 인용하며 "소설가가 꿈이었다!"고 써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후 천 선임 행정관의 계정은 삭제됐다.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일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규정과 관계없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일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은 마세라티 인도로 돌진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혐의로 A씨(23)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1시42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교차로에서 쏘나타 차량을 몰던 중 마세라티 외제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1%로 조사됐다.

충돌 사고로 밀려난 마세라티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철제 기둥을 들이받았다. 사고 인근에 행인은 있었지만, 운전자를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 공사 차량 공터서 화재...트럭 10대 불타

1일 오전 3시30분쯤 화순군 동면 한 공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터에 주차돼 있던 도로포장 등에 쓰이는 막서트럭 7대와 5톤트럭 1대, 1톤트럭 2대를 태워 9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소방장비 30대를 투입해 신고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음주사실 들통 간부 경찰관 입건

광주 남부경찰서는 전남 지역 모 경찰서 A 경정(54)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정은 전날 10시30분쯤 광주 남구 송하동 제2순환도로 흐드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한 남성이 몰린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정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수치인 0.075%로 측정됐다.

경찰은 피의 사실 공표를 이유로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나이, 피해 정도 등을 밝히지 않았다.

차량 밟고 올라가 사워여성 훔쳐본 30대 짐유

차량 밟고 올라가 '사워 여성' 훔쳐본 30대 짐유 3년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워하는 여성의 훔쳐보는 등 주거를 침입한 3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5시53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B씨(21·여)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워 중인 B씨를 훔쳐보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집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밟고 올라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후 복귀 직원에 차별 대표 벌금 100만원

육아휴직 전과 비교했을 때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회사 대표 A씨(49)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

광주에 위치한 모 회사의 대표인 A씨는 지난 2017년 중순쯤에 복직한 직원 B씨를 원래 부서가 아닌 고객상담센터로 전보시키고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휴직 전 220만 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복직 후에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타다'는 불법일까 합법일까...오늘 1심 첫 재판

VCNC "플랫폼기반 서비스업...면허규정과 관계없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이번주 처음 열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범인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다.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